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을 12월 개통 ... 개발업체 선정 中

관세청,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개발 위해 민간 주도 방식으로 구축

관세청이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을 12월 개통할 예정이며, 현재 개발 업체를 선정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은 중소·영세 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 등을 변환해 수출신고서를 자동 생성·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세청은 4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국내 쇼핑몰, 물류업체, 수출·수출 대행업체 대표와의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을 3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한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 대책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업계 전반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업계 실무자 중심의 ‘민간자문단’을 구성해 추후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시 관(關) 주도의 개발이 아닌 초기 개발 착수 단계부터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갖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이 반영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업체를 선정 중이며, 을 12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 판매자나 영세기업이 물품의 보관·통관·배송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업체별 수출실적을 국세청 전산자료와 연계해 별도 수출실적 증빙 자료 제출 없이 부가세 환급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꾸준히 열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수출을 국내 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는 961만 건(32.5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금액 36%(금액 기준 : 25%) 증가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판로로 떠오르고 있다.

| 정영선 기자 |